

참여정부 평가

≡ 차례 ≡

1. 멀리 보면 보이는 것 -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2. 참여정부 평가 - 정부
3. 참여정부 평가 - 경제
4. 참여정부 평가 - 사회
5. 참여정부 평가 - 외교·안보
6. 참여정부 평가 - 복지·교육

1.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신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부가 막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 정부가 다해야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해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각기 할 일을 잘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인 사회로 가자면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언론, 책임 있는 국민이 되어 합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소비자 주권의 시대, 주권을 행사할 만한 의지와 역량 있는 시민이 되어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참여정부는 책임을 다한 정부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100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넘겨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독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물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 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통융합, 4대 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을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며 해 온 것입니다.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빛을 많이 졌으니까요.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한 정부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정부입니다. 가장 투명한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확실히 지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정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정부,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정부, 그래서 나라의 자주권과 위신을 높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경제실패, 민생파탄, 총체적 위기라는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중상모략입니다. 그야말로 10년 전 우리 경제를 결판낸 사람들의 염치없는 모략입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잘 관리하여 극복했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원칙대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정부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정부, 진보의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어 두었던 자주국가의 숙제,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 밀려 미루어 두었던 갈등과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소신을 가지고 할 일은 하는 똑심 있는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의 과제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요구한 것이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공약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세계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와 적대적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심지어 여당조차 차별화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6. 16)

□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그에 맞는 전략, 그리고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공정해지고 보다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유착과 부패가 점점 더 설 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권연유착, 이런 얘기들도 그리고 서로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도 점차 어렵게 돼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정의가 꽃 피어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회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보육, 고용지원, 직업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투자를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추어 보면 아직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2007. 4. 26)

□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아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 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넓어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 상품, 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 간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

한 성장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인적자본 투자, 기회의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비전 2030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2. 참여정부 평가 - 정부

□ 참여정부는 질적 혁신을 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정부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조직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공직사회의 질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일하는 자세와 방식,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직접 행정 각부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혁신수석실을 두고 혁신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혁신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혁신의 수준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TV를 보니까 특허청이 지난 4년 동안 혁신을 통해 심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특허청이 된 것입니다. 변리사도 나와서 그렇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제가 공약했던 것입니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모두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포상을 받아서 내부에서 기관장 승진이 되기도 하고 승진발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부혁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혁신성과가 각 부처의 혁신 브랜드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어 기관 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정부혁신이 좀더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와 정부의 역량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반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엔 공공행정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성과와 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책임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습니다. 할 일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물론 작은 정부라는 말을 효율적인 정부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복지지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3분의 1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지출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4.1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1/3 수준, 일본의 32.9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가 많은 일 할 수 있어

공무원들 내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좋은 정부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경제든 민주주의든 압축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공무원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이 많습니다. 정부 혁신 때문에 저도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도 보통 이상의 속도를 내라, 혁신기술도 개발하고 혁신문화도 정착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작은 정부라 해서 구조조정을 능사로 삼지 않는 문화를 정부 또는 우리 국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과를 거두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계속 지원하자면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교육을 계속 지원하자면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자면 공직자들 또한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꼭 내 주시고 국민에게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국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3. 참여정부 평가 - 경제

□ 민생문제 해결 못한 책임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은 없어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와 무리한 논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파탄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표현할 말이 없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깎아 내려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민생이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극화까지도 경제만 좋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참 단순하고 속편한 논리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집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그래도 버티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 자

영업도 늘어납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의 차이도 더 커집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할수록, 어느 한쪽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은 높아지고 집값도 교육비도 통신비도 늘어납니다. 모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 보통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오로지 경제가 민생문제의 원인이고, 경제만 풀리면 민생문제도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풀립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시적인 원칙이 필요

참여정부는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부양책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에서 여러 차례 그런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3저 호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증시부양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땅값 폭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며 1992년 대규모 경기 불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러한 불황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불을 붙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가계대출을 방치했습니다. 덕분에 2002년 우리 경제는 7% 성장했지만, 다음 해에는 성장률

이 3.1%로 크게 떨어졌고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채 사태로 가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 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원칙을 지켜 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올해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게 되고, 수출, 경제규모, 제조업 경쟁력 모두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방과 혁신의 경제, 복지와 기회의 사회, 평화와 협력의 외교 안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과 인재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4. 참여정부 평가 - 사회

□ 노사관계가 안정 되고 있어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111일이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7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

다만,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노동조직의 사회적 교섭력이 약화되어 간다면,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복지 예산을 늘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과거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복지상담실을 만들었고 행정인력을 대거 복지담당으로 전환배치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도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공인력은 확충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1,800명 늘렸고, 소방인력도 17% 확대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고 나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이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래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러나 앞으로 상승기간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저는 원칙대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제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는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아주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 속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습니다. 인사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 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조금 전 서명식을 보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

겁니다.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오늘 투명사회 비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서 2007. 3. 9)

□ 역사적 과제 마무리 부끄럽지 않아

저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그런대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단지 정치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 평균이 되면 성장률을 1퍼센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참여정부는 경제발전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계승과 극복의 관계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입니다. 상당한 진보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은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은 인사에서 지역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해먹는다는 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했

다가 안팎에서 타박만 당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선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5. 참여정부 평가 - 외교 · 안보

□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독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중대한 안보현안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

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한·미동맹 또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관계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공약만 하고 미뤄온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16)

□ 북핵문제, 6자회담 통해 해결의 가닥 잡혀

지금 동북 아시아와 중동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우디 국왕자문회의에서 2007. 3. 26)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견이 같아졌습니다. 미국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같아진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미국정부가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

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 교류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2007. 6. 19)

□ 경제와 안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6. 참여정부 평가 - 복지·교육

□ 사회복지분야 예산 정부재정의 28%, 참여정부 들어 8% 증가

사회분야에 우리 정부예산의 20%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 8% 정도 늘려서 28% 까지 왔습니다.

8% 하나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뭐 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착실하게 다 했습니다. 원칙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부의 책임, 사회적 정책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2007. 3. 6)

□ 보육·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000억 원에서 2007년 7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

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올해 13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확대 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000명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매월 8만 9,000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건강관리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은 국가발전 전략의 종합판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더 나눠 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를 빠르게 고쳐야 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50개 과제 중 24개가 제도 혁신 과제이고, 26개가 선제적 투자 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조정

이라든지 또 부당한 조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철저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조세 투명성 확보 통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약간의 국가 채무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특별히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야 하고, 10년 이상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 초중등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은 입시개혁으로 풀어야

한국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아이들은 과중한 입시 부담, 성적 부담을 지고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집니다. 그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 계층이동의 기회상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중등학교 선생님은 교단붕괴, 공교육의 부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대학교육의 문제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못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이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개혁위 교육혁신안의 기조를 존중합니다. 지방교육의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 연구개발비를 지방배정 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입시가 문제인데, 대학은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서열화가 아니라 적절한 차별화, 학연사회의 해소, 내신과 교단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경쟁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양화 시대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개방도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일차적으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과 평가를 수용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유학 수요의 흡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조령모개한다, 교육당국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등 오해가 있는데, 한국교육 품질이 정말 엉망입니까?

더 타임즈가 매긴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작년에는 6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중등교육의 평가 결과를 보면,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중등학생까지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학과 과학 학력의 세계적 평가인 팀스(TIMSS)의 결과에서도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한국 교육은 그동안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첫번째로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성공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 보면 모두 다 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교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지면서 보편교육이 실시되고 국가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명돼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 물으면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두 한국 교육이 위기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찬사가 대단합니다. 대통령 대접 잘 받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면 목에 힘쓰고 대접 받고 다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